

#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 경 장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 응시자 유의사항

- ※ 경장(1교시) 시험 과목 : 형사소송법(07), 해사법규(03)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해 양 경 찰 청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장주의
  - ②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 ③ 국선변호인제도
  - ④ 증거재판주의
2. 다음 중 직권주의적 요소로 옳은 것은?
- ① 공소장 변경요구제도
  - ② 공소장 일본주의
  - ③ 증거보전청구권
  - ④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도
3. 다음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절차가 아닌 것은?
- ① 구속의 취소
  - ② 영장제도
  - ③ 형사보상청구권
  - ④ 체포·구속 적부심제도
4.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5. 다음 중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과 다른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된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8.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
- ㉡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경우
- ㉢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경우
- ㉣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나 음모를 인정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 ②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 전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③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10.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11.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1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범에서 교사사실의 인정
-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③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 ④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

13.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4.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②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③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이상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 중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 ②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1. 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 매체를 포함한다.
-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2.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빠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뒤흔들자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③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 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③ 참고인의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사전에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영상녹화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는 없다.

24.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 ②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는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25.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요청하면 변호인은 언제라도 피의자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룰 수 있다.
- ③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6. 다음 중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27.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없다.
- ④ 판사는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28.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9.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②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전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30.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 ②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④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31.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는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
- ②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는 경우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2.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① ㉠ 성년의 여자                      ㉡ 성년의 여자
- ② ㉠ 의사나 성년의 여자            ㉡ 의사나 성년의 여자
- ③ ㉠ 성년의 여자                      ㉡ 의사나 성년의 여자
- ④ ㉠ 의사나 성년의 여자            ㉡ 성년의 여자

33.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③ 검찰에 의해 압수된 후 피의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 ④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거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34.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알선수뢰죄, 강간죄, 경매입찰방해죄, 절도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이다.
- ④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②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④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36.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 ③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 ④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37.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 ④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38.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와 피고인 보석의 차이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재판의 형식
- ③ 취소 사유
- ④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9.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고소할 능력을 갖추었으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40. 다음 중 재심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기각의 판결
-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 ③ 형 면제판결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

## 해 사 법 규

1.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② 선박이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이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에 실시할 수 있다.

2.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무기 또는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관은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나포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3.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 )로써 (으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 )로써(으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① 심판      ② 판결      ③ 재결      ④ 선고

4.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상레저활동”이란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하며 내수면에는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이 포함된다.
- ④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5.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 ③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는 소아용으로 한다.
- ④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이상, 속도가 20노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수산업법」상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 중 허가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시·도지사
-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해양경찰청장

7.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선박 출항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 ② 태풍주의보 시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④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단, 여객용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9. 다음 중 「선박법」상 선적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선박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른다.
- ③ 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선원법」상 선박 내에서의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 ㉡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 ㉢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선장의 직접 지휘 규정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 ㉤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 ㉥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다음 중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해사와 기관사의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하고, 통신사는 1급에서 5급까지로 구분한다.
- ②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운항사의 하위등급 해기사로 본다.
- ③ 선박(합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승선한 자가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면허 갱신 신청일 전일부터 5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④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12.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의 조업해역 구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해역                      ② 조업금지해역
- ③ 조업자제해역                      ④ 일반해역

13.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상 조업보호본부의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 ②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의 동태 파악
- ③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처리 및 관계기관 통보
- ④ 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14. 다음 중 「선박안전법」 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가)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 ㉡ (나)이란 수면에서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 ① 가 항행안전성                      나 감항성  
 ② 가 복원성                          나 감항성  
 ③ 가 감항성                          나 복원성  
 ④ 가 항행안전성                      나 복원성

15. 다음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상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최대승선인원의 (가)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나)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한다.
- ㉡ 최대승선인원의 (다)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 ㉢ 총톤수 5톤 미만인 낙시어선의 경우 : 2개 이상의 (라) 소화기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120% | 20%  | 30% | 간이식 |
| ② | 120% | 20%  | 20% | 휴대식 |
| ③ | 110% | 110% | 30% | 간이식 |
| ④ | 110% | 110% | 20% | 휴대식 |

16.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상 낙시어선의 출입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낙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낙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④ 낙시어선업자는 해당 낙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5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1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에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는 방제조치에 해당한다.
- ② 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해당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일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주권적 권리는 모두 몇 개 인가?

- ㉠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활동
- ㉤ 해양과학 조사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 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을 거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① | 허가 | 6개월 | 외교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 ② | 동의 | 6개월 | 외교부장관   | 해양경찰청장  |
| ③ | 동의 | 6개월 | 외교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 ④ | 허가 | 6개월 | 해양수산부장관 | 외교부장관   |

20.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상 관제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③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물운반선
-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21.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 관제에 따라야 한다.
- ②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 ③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 ④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다음 중 「어선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선의 성능향상 도모
- ② 어업생산력의 증진
- ③ 어선에 관한 시험·조사·지도 또는 단속
- ④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의 확보

2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미만의 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① 171              ② 172              ③ 371              ④ 372

24.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구조본부장의 관장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구조본부 직원의 지휘·감독
- ②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조업무 수행
- ③ 해상수난구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통제

25.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수난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④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26.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둔다.
-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둔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사고는 제외한다.

27.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 ②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 ③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 ④ 연안체험활동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36. 다음은 「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한 자로서 (㉡)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① ㉠ 15년

② ㉠ 15년

③ ㉠ 20년

④ ㉠ 20년
- ㉡ 치안정감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감

37. 다음 중 아래 <보기> 안의 법(법률)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보 기> —

㉠ 해양경비법

㉡ 해양경찰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① 해양경찰청이 단독 소관 하는 법률은 모두 6개이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이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정은 되었으나,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내수면과 해수면은 모두 해양경찰의 관할이다.

38.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상 주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은?

- 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②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 포함)

④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제외)

39.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상 항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 항로에서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홀수 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0. 다음 <보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 <보 기> —

㉠ 항만하역사업

㉡ 감정사업

㉢ 검수사업

㉣ 선박관리업

㉤ 선박대여업

㉥ 해운중개업

㉦ 해운대리점업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